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9.5% 증가

올해는 수출둔화 등으로 다소 어려움 예상

이용우 기획관리실장 정례브리핑서 밝혀

지난해 우리 항만은 태풍 매미의 여파와 인근 중국 항만의 급성장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9.5% 증가한 1,443만TEU(잠정치)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는 등 비교적 견실한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우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은 지난 1월 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항만 컨테이너물동량 분석 및 올해 전망치를 설명하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전년 대비 9.9% 증가했고 환적화물은 11.0%(2003년 9.4%) 늘어난 510만TEU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2004년 초반의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부산항은 지난해 11월 최초로 월간 100만TEU를 돌파하는 등 전년 대비 9.8%의 물동량 증가율을 보였고 인천항도 남항 ICT터미널 개장 등에 힘입어 14.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광양항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머스크(Maersk) 일부선대의 기항지 변경과 미 서부 항만 적체로 인한 광양항의 일시적 미기항(skip) 등으로 물동량 증가율이 11.1%(환적은 4.8% 증가)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올해 물동량 처리전망에 대해 "수출 증가율의 급격한 둔화가 예상되는데다 상하이 양산항 개장 및 일본의 슈퍼추후항만 구체화에 따른 환적화물 감소 우려 등으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실정"이라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8.7%~10.6%로 증가한 1,569만~1,596만TEU, 환적화물은 8.4%~13% 증가한 553만4,000TEU~576만6,000TEU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종합해양관리제도 구축과 관련해 이 실장은 근원적이고 총괄적인 정책들을 도입해 해양환경 정책의 큰 틀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우선 해양유출 기름 등 해양폐기물 방제 전담조직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해 해양환경관리분야의 민간전문종합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수욕장, 갯바위 낚시터, 양식장 등 해양오염 취약지역에서의 각종 쓰레기 및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점검·단속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해사채취 등 해양에서 이뤄지는 이용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양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종합적인 해양환경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기존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선박투자펀드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할 때는 선박투자회사가 만료돼 투자원금을 상환할 때 선박처분에 따르는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하며 본인이 투자한 선박펀드가 만료시점에서 용선주와 선박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품인지, 선박시장에서 매각하는 상품인지 여부 등을 꼼꼼



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선박투자회사 인가시 용선주인 해운 선사의 재무건전성을 검토항목에 추가하는 등 신규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선박투자회사에 손해를 끼쳤

을 때 선박운용회사의 배상책임을 신설하는 등 그 간 선박투자회사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항만경쟁력 강화 범정부 협의체 구성

'부산·광양항경쟁력강화위원회' 발족

위원회 산하에 3개 실무기획단 운영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 된다.

정부는 2월4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현재 경제부총리 주제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항만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기관의 관련 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부산·광양항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는 물론 철도공사·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부산항만공사 등 관련기관을 망라해 구성된다.

위원회는 항만 인프라 조기확충과 항만물류산업 발전 등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범부처적 협조가 필요한 모든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부산신항 배후도로와 배후철도의 조기 완공 및 광양항 배후 고속도로의 조기 구축 방안, 항만 배후부지 조기 조성 및 기존 배후부지 중 물류부지 확대 필요성 등 민감한 사안도 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또 항만과 배후부지의 각종 유치활동을 통합 조정하는 방안은 물론 민간의 하역장비 확충의욕 제고와 항만 물류산업의 종합적 발전을 위한 정

부지원 등 항만운영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기능에 따라 부산·광양항의 항만시설과 배후수송망 등의 조기 구축을 검토하는 '부산·광양항 건설기획단', 광양항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물동량 창출기반 조성 및 물류지원시설 확충을 담당할 '광양항 활성화 기획단', 올해말 준공 예정인 부산신항의 차질없는 개장 준비와 조기 활성화를 지원할 '부산신항 개장준비 및 활성화 기획단' 등 3개의 실무기획단을 두게 된다.

각 기획단별로 논의된 사안은 즉시 위원회에 상정돼 합의가 도출되며 합의사항은 경제장관간담회 등에 수시로 상정돼 국가계획으로 확정짓게 된다.

위원회는 각 실무기획단별로 협의과정을 거쳐 오는 3월말까지 추진과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친 뒤 오는 6~7월경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경쟁력 강화위원회가 이러한 대내외적 우려를 씻고 우리 항만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유용한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